

7월 2차·9월 3차 후속회담 가능성... 바빠진 중·일·러

7월 27일 정전협정기념일 중 시진핑 北 방문... 4차 회담 전망도
9월 UN총회 김정은 참석 시나리오, 트럼프 중간선거 앞 '빅이벤트'

향후 일정·과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중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부분이 빠지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은 벌써 추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쏠리고 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첫 만남은 70년 한반도 냉전 종식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미 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정상 사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회담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앞으로 이번 싱가포르 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며 김 위원장과 만나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거듭 시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1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뿌리 깊은 적대관계와 북 핵 문제가 회담 한번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며 "두 정상이 큰 물꼬를 연 후에도 완전한 해결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공동합의문에 'CVID'가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 제기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실무회담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정전협정 기념일인 7월27일 판문점에서 후속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도 예정돼 있어 중국까지 포함한 4차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후속 회담이 꼭 북미 양자 간이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 형태로 성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오는 9월이나 10월 미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크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는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백악관 방문과 함께 유엔총회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의 백악관 초청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빅 이벤트'가 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장 밖에 있었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중국의



140분간의 담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한 리영호 외무상,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주성 통역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미국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이연향 통역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

행보가 주목된다. 북미의 밀월관계가 계속된다면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입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여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

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국전쟁 정전 65주년인 오는 7월26일에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남북 관계에 적극적인 입장이 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3

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을 초청한

바 있다.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지 못한 일본은 '재팬 패싱'에 속을 끓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지만 납치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 기자 tuim@

문대통령 '운전자론' 다시 주목...비핵화 큰 산 넘어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내일 靑 방문 회담결과 설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2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음에 따라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문 대통령이 이제껏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북미정상회담 성공적 개최 자체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큰 산'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로 대변되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중전 선언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은 이제부터라는 분석과 함께, 문 대

통령의 중재자 역할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어렵게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 이번 성과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로 연결하려면 앞으로 북미 간 세부 논의가 고비에 부딪힐 때마다 다시 양측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남북, 한미 간 소통에 한층 힘을 쏟을 전망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14일 청와대를 예방해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된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대목이 담긴 것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운전자' 역할에 힘을 실는 모양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문 대통령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후 예정된 장성급 군사회담(14일)과 체육회담(18일), 적십자회담(22일) 등 분야별 실무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는 물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철도·도로·산림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열강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분위기 조성에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바른미래·평화당 "환영"...한국당 "CVID 제외 유감"

여야 반응

여야 주요정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6·12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일제히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합의문에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해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회담은 국제정치와 동북아 질서의 안보지형을 뒤바꾸어 놓았을 뿐 아니라, 평화를 향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며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고,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새 물길을 연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또 "회담 추진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운전자'를 놓지 않고 평화의 불씨를 되살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세기의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후속 회담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당 중앙선대위 전희경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서명한 전문에 CVID가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 있어 유감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고 논평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합의를 통해 공고한 평화체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북미 정상들의 의

를 확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70년간 이어온 적대 관계 해소의 첫걸음을 떼고 새로운 관계와 대화의 장을 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 그리고 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낙관적 평화주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의 위대한 시작을 알린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두 정상의 통 큰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아울러 남북,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매진한 문재인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개입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